

# “북핵, EAS 참석국 모두 타격… 국제사회 결의 보여줘야”

(동아시아정상회의)

## 尹, 인도네시아서 EAS 참석

“안보리 상임이사국 책임 무거워”  
대북제재 막는 러시아·중국 겨냥  
우크라이나 침공 국제법 위반 행위  
남중국해·미얀마 폭력사태 등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회의 참석국 모두를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라며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정상회의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EAS에 참석해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중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세계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이를 저지하려

는 국제사회의 결의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은 유엔 안보리로부터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다”며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밝혔다.

이는 안보리 상임이사국(미국·러시아·영국·중국·프랑스)이면서도 지속적

인 거부권 발동으로 추가 대북제재를 막는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 불법행위 차단 필요성과 함께 “북한의 WMD 문제는 곧, 북한의 인권 문제”라며 관심을 요청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시 70여년 전 불법 침략에 의해 국가 존망의 위기를 겪은 적이 있다”며 “지난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키우를 직접 방문해 인도 지원, 안보 지원, 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우리가 공약한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충실히 이행해 향후 우크라이나의 재건 복구 노력에 책임 있게 기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남중국해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의 원칙”이라며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규칙기반의 해양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른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수호하면서 아세

안과 해양안보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미얀마에서 지속되는 폭력 사태에 대해서도 “폭력 중단과 포용적 대화를 통한 아세안의 해결방안을 지지한다”며 “한국은 미얀마 국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세계의 성장과 번영은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에 달려 있다며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을 하나로 묶는 동력은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대한 책임감”이라며 “대한민국은 보편적 가치에 따른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확립하는데 책임 있게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역내 기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아세안을 비롯한 인태 국가들과 모두 함께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 한덕수 “긴축정책, 전 정부 탓… 정부·국민 허리띠 졸라매야”

(국무총리)

박범계 “유독 韓 경제 침체” 질문에 한 총리 “전 정부 국가부채비율 커 3고시대… 옛날처럼 확장정책 못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윤석열 정부의 긴축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 국가부채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정부와 국민이 모두 “허리 띠를 졸라 맬 때”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7월에 한국의 산업활동 3대 지표(생산·소비·설비 투자)가 모두 감소했고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연이어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선,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때문에 옛날처럼 마음놓고 확장 정책을 쓰지 못한다”며 “중요한 것은 경제가 위기에 빠지지 않고 국가 경제 최후의 보루인 재정 쪽에서 위기 상황을 맞지 않는 것을 주안점을 뒀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경제가 지속가능하고 성장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을 통해 이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박범계 의원이 경제 침체 현상은 전 세계적인데도 유독 한국이 경제 성적표가 좋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하라고

하자 한 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50% 달하고 400조원 늘었다”며 “우리 모든 경제는 대외 요인에 의해 평가받는 처지다. 우리는 결국, 재정이나 금융 측면에서 확장적 정책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정부나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해 지속가능한 성장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한 총리가 참여정부 제3대 경제부총리였던 점을 들어 “금융 정책과 재정 정책의 조정과 통합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이 한 총리의 철학이다. 그때와 지금이 다른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참여정부의 1대 경제부총리는 김진표 현 국회의장이었다. 2대는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4대는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가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면 한 총리가 대한민국을 ‘악한 존재’라고 치부한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악한 측면이 있다. 우리 통화가 국제적 수용성 측면에서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시·미시 경제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마치 세계적인 기축통화의 반열에 이른 것처럼 무분별한 재정 운용을 하게 되면, 국가부도상태로 이어진다”며 “어느 정부와 정치인이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것을 싫어하나. 국가의 중장기적 건전성을 위해 인내하고 참아야 한다는 고통스런 요구를 국민에게 알려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與 “엑스포 유치 총력”… 野 “오염수로부터 제주도민 보호”

김기현·박광온 각각 부산·제주 방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부산광역시 방문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떠난 반면, 박광온 원내대표는 제주도로 내려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부산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엑스포 유치를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을 설명했다.

김기현 대표는 “앞서 준비를 시작한 사우디아라비아가 막강한 경쟁국이지만, 막판에 최대한 역량을 집중한다면 11월말 5000만 국민을 열광케 하는 소식이 전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능도 마지막 한달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달리기 제주도 마지막 한바퀴 스피드가 메달 색을 결정한다. 보다 많은 회원국의 마음을 부산으로 움직이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타 임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엑스포를 유치하면 총 61조원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50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4000만명에 육박하는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제주 예산정책 협의회에서 오영훈 제주지사 등 관계자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의 실질화를 통해 제주도의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에 대해

민주당이 ‘긴축을 강조하다 보니, 국민의 삶을 외면한 예산’이라는 지적을 했다. 꼭 필요한 민생 안전과 국민의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지켜 오고 있다”며 “예산안 긴축편성이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는 지자체의 민생 사업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려고, 실질적으로 아마 그런 현상들이 곳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제주 수산업의 피해가 4000억원 이상으로 현재 추산이 된다는 보고도 있다”며 “해양투기를 중단시키는 것이 당의 목표이고, 그것이 제주도민들의 삶을 지키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 이재명 대표, 檢 9일 출석… “당당히 맞설 것”

“檢 사상 초유의 강압소환 요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9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검찰은 번번히 국회를 무시하더니 급기야 이 대표에게 정기국회 출석의무도 포기하고 나오라는 사상 초유의 강압소환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전날(6일)까지 이 대표 측은 오는 12일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했지만, 검찰은 7~9일 사이 피의자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박 대변인은 “더구나 검찰이 요구한 출석 일자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대정부 질문 기간”이



무기한 단식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영화 봉호동 전투 단체 상영회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라며 “헌법이 규정한 의정활동을 부정하는 검찰의 반헌법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들이 저열(低劣)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 정대(正大)하게 나아가겠다”면서 “대정부질문이 끝난 직후인 9일 검찰에 출석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소환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